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14
----------	------

발의연월일 : 2024. 12. 27.

발 의 자 : 용혜인 · 민병덕 · 장종태

김성환 · 황명선 · 이수진

이원택 · 김남희 · 소병훈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불이행 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발의된 바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하여, 공무원이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
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7조).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7조(복종의 의무) ----- ----- ----- --. <u>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u>